



금융위원장,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2016. 6. 13.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개혁 추진현황

1.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1
2. 금융협회 자율규제 개선 5
3.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현황 7
4.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운영현황 8
5. 금년중 국회 금융개혁법안 입법 추진 10

II. 주요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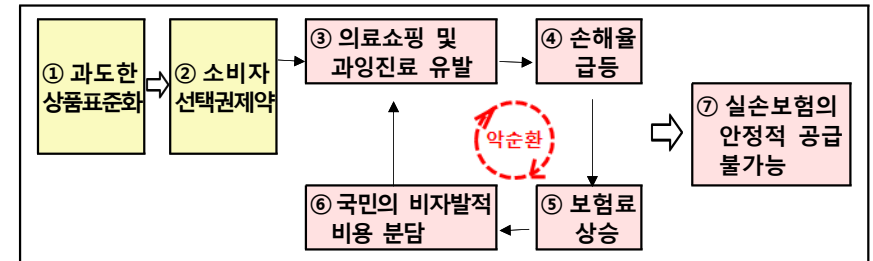
1.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13
2.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14
3.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 15
4. FATF 총회 개최 (6.18~24, 부산) 18

금융개혁 추진현황

1.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 현황 및 문제점 >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민영 보험으로, '15년말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상품
-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 제기중



- (①과도한 상품표준화 / ②소비자 선택권 제약) 도입초기 판매 편의성 차원에서 추진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 제약
 - *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결과 초래
- (③의료쇼핑·과잉진료 확산) 상품구조의 문제점을 악용한 일부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확산
- (④손해율 급등 / ⑤보험료 상승) 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보험료 상승으로 상쇄시키며 소비자에게 전가
- (⑥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비용 부담)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 구조* 심화
 - * 원하지 않는 보장내역까지 어쩔 수 없이 구입한 대다수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부담
- (⑦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불가능) 향후 보험료 급등으로 오히려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되었을 때 혜택받기 어려울 가능성

참 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사례

□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사례

[사례] 위장환자를 통한 디스크 진료체험(10개 병원 중 9개가 동일유형)

- ① 경미한 허리통증시에도 우선 고가의 MRI 진료 추천
- ② 증상이 심각(실제는 경미)하니 치료 및 수술 필요성 안내
- ③ 열치료술 등 고가 진료와 30만원 이상의 주사치료 권유
- ④ 실손 가입여부 확인 → 치료비 공짜임을 안내

□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14년중 실손의료보험 최상위 청구내역)

순 위	구 분	총 계(원)	비 고
1	여, 44	148,400,000	대장암
2	여, 55	119,600,000	경미상해로 반복치료
3	남, 55	114,800,000	말기암
4	여, 55	105,200,000	악성림프종
5	여, 37	101,700,000	유방암
6	남, 65	100,900,000	위암
7	여, 50	100,400,000	대장암
8	여, 49	100,200,000	보험사기로 보험금 환수
9	여, 55	98,300,000	경미상해로 반복치료
10	남, 56	97,800,000	직장암

□ 비급여 진료 현황(도수치료*)

* 손으로 마사지하여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

구 분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코 드	MX122	51040	(A병원)SP6 (B병원)OZ30 (C병원)B
명 칭	도수치료	도수치료	(A병원)도수치료 (B병원)통증도수 (C병원)CON.Manual
비 용	시장자율 (보장하지 않음)	16,520원	(A병원)135,000원 (B병원) 80,000원 (C병원) 45,000원

< 금융부문 제도개선 기본방향 >

◇ 이에 지난 5.18일 복지부/금융위 공동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금년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추진 예정

◇ 이와 병행하여 금융당국은 상품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 공급 뒷받침

□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소비자의 편의 및 선택권 제고

❶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 개편

-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및 안정적 유지* 가능

* 도덕적 해이 빈발로 손해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보장내역은 기본형에서 배제

- “다양한 특약”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통해 과도한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 특정 진료항목에서 도덕적 해이 확산시 해당 특약의 보험료 급등 불가피

※ 참고 : 보험료가 약 40% 저렴하고 쉽게 오르지 않는 기본형 상품 (예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형 (모든 입통원 치료)	15,000원	⇒ 기본형 ¹⁾	8,500원 ²⁾
		⇒ 특약① : 근골격계 치료	4,000원
		⇒ 특약⑤ : 수액주사 치료	500원

1) 향후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시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즉시 작용

2) 현재 40세 남자 실손보험료를 대략 15,000원으로 가정할 때, 근골격계/수액주사 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보험료는 약 8,500원 수준까지 하락 가능

② 실손의료보험이 순수보장성(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

-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이 他보장상품에 통합되어 판매됨에 따른 중복가입 유발,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
- 이와 함께 단독형상품 가격의 보험다모아를 통한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

⇒ 이러한 상품구조 개편은 민간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관련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차단

- 금감원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향후 추진일정 >

□ 상품구조 개편 관련 추진계획

- '16.9월중 상품심의위원회 발족(상품구조/보장범위/보장내역 등 논의)
- '16.12월중 新표준약관(안) 확정 ⇒ '17.4.1일 新상품 출시

□ 관련 인프라 재정비 관련 추진계획

- '16.4/4분기중 금감원내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완료
- '16년중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개선 과제 단계적 추진방안 확정

※ 참고 : 향후 복지부/금융위 공동TF에서 논의할 사항 (예시)

- ①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코드 사용 활성화의 단계적 추진방안
- ② 진료 세부내역에 대한 표준서식 마련
- ③ (중장기)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 등

2.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

< 추진배경 >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한 금융 개혁 과제로 법령규제('15.6.15)와 그림자규제('15.9.18)를 개혁

- ① (법령규제) 1,064건 규제를 전수조사·검토하여 211건 개선
- ② (그림자규제) 불필요한 행정지도를 폐지(약 700 → 43건)하고 그림자규제를 엄격히 통제하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시행('16.1)

□ 금융규제개혁의 완결을 위해 7개 금융협회* 규정(총 329건) 및 공문 등 자율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 7개 업권 :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저축은행, 신탁

○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잔존

① 금융당국이 필요에 따라 협회 자율규제를 활용 중(우회규제)

▪ 특정 대책 마련 시 금융위·금감원이 관련 협회와의 공동 TF, MOU 체결 등의 방식으로 행정조치 사항을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관행

② 일부 협회 자율규제는 과도하거나 경직적

▪ 금융회사가 내규로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협회가 통일적으로 정하고 한번 정해지고 나면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지속

③ 협회 자율규제의 운영 절차에 대한 투명성·독립성 부족

▪ 협회 차원에서도 자율규제 제·개정 관련 명문화된 규정 또는 절차가 부족
▪ 자율규제 제·개정 시 금융당국과 사실상 사전협의·승인 하는 관행

< 향후계획 > : 자율규제 개선 및 관리절차 마련

① 7개 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6.7일 ~)

② 규제별로 하나하나 검토 후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존치 또는 법규화 방안 마련(~7월)

* 금융권 준법감시인, 옴부즈만, 금융당국 등으로 자율규제 개선 TF 운영

③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절차 운영, 일련번호 부여, 규제내용 공개 등 금융규제운영규정에 준하는 통제방안 강구(~8월)

⇒ 「옴부즈만」과 「금융개혁추진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확정

참 고

협회 자율규제(Self-Regulation) 운영 현황

1. 협회 자율규제 현황

□ 협회 자율규제란, 회원사(금융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

- ①법령 또는 규정(금감원 시행세칙 포함) 위탁에 의한 규제와
②금융회사 스스로 공동 운영하는 규제로 구분 가능*

* ①은 ②와 달리 금융위 또는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사후보고 의무 등을 부담

- ① 사례 : 광고, 경영공시, 보험상품 비교공시, 표준약관 등
- ② 사례 : 펀드 판매 준수사항, CMA 업무 모범규준, 여비 규정 등

※ 법령에서 협회 업무에 “자율규제”를 명시한 예 : 3개 업권
: 자본시장법 §286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2①, 신탁법 §89①

< 협회 자율규제 규정 현황 >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신	저축	신탁	계
56개	71개	21개	20개	37개	49개	75개	329개

2. 협회 자율규제 운영 제도 현황

①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 대부분 업권이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모든 업권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의견청취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음

② 규제심의기구 운영

- 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 운영 중
- 회의결과는 금투, 생보, 손보만 외부 공개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신	저축	신탁
운영여부	○	○	○	○	○	○	×
외부위원 비중	6/7	6/7	5/6	7/10	2/6	×	-
회의결과 공개여부	×	○	○	○	×	×	-

③ 규제목록 온라인 공개 및 규제개선 채널 운영 현황

- 저축은행, 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규제목록을 공개하고, 규제개선 게시판 운영 중

3.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현황

< 既 발표 과제 >

- (공모펀드 활성화)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4.27)
- 추진 일정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거래소 개편)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

* 20대 국회에서 이진복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진행 중인 과제 >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 ①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및 기업금융 부수업무, ② 기업금융
업무 수행시 적합한 건전성 규제체계, ③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 지원 등
-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늦어도 7월중에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

□ 상장·공모제도 개편

-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
- * ① 증권 인수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② 형식적·재무적 상장요건은 완화하되,
상장주선인과 거래소간 협력 및 상장주선인 책임성을 강화
- 관계기관·전문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 발표 예정

□ 회사채 시장 활성화

-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 * ① 중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②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활용 절차
요건 등 개선, ③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자금의 회사채시장 유입 유도
④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지속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중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

4.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운영 현황

□ **(추진배경)** 금융회사를 통해 전달받은 기업 애로사항 (간접 접근) → 기업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측면의 애로사항 (직접접근의 역(逆)발상)

- ① 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전반적 점검 ② 그간의 금융 개혁 과정에서의 추가 피드백 사항 발굴

* **(피드백 점검)** i) 금융개혁이후 기업에 개혁과제 전달과정의 애로사항
ii) 환경변화 등으로 추가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기업관점에서 발굴

- 구조조정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창업·벤처, 유망서비스, 신성장수출기업 등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산업의 금융애로를 선도적, 적극적으로 해소

□ **(특별반 구성)** 부위원장을 특별반장으로 하고 1급이 팀장을 맡아 시의성 있는 뚜렷한 테마를 점검하는 특별반 구성

- * **①팀 (창업, 유망기업)** : 창업·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클라우드펀딩 등 효과적 자금공급 방안 모색
- ②팀 (정책금융수혜기업)** : 청년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방안 모색, 보증보험 이용상 불합리 관행 등 점검
- ③팀 (자본시장이용기업)** : 중소·벤처기업의 M&A, IPO 활성화, 상장준비시장·상장제도 개선 방안 점검
- ④팀 (서비스, 수출기업)** : 문화콘텐츠·관광·보건의료·SW 등 유망서비스 기업 금융애로 점검, 수출입 금융 현장 애로 점검

□ **(건의접수현황)** 21개 금융회사(금융유관협회 포함), 9개 산업 협회*, 363개 기업을 통해 **총 604건 건의접수** (5월1주 ~ 5월4주 간 접수)

* **(보건의료·문화콘텐츠·관광분야 9개 협회)** 의료기기, 제약, 영화제작가, 영화 프로듀서, 드라마제작사, 광고산업, 관광, 여행업, 숙박업 협회

- 대출과 관련된 정책보증의 접근성 제고 등 건의가 큰 비중 차지하고, 콘텐츠 분야의 사업성평가 등 개선·확대 건의도 다수
- '자본시장 제도, M&A·상장 애로' 및 '성장사다리, 클라우드 펀딩'은 건의가 구체적이고 제도개선과 연결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

□ **(현장점검현황)** 자본시장이용기업(③팀, 6.9일), 콘텐츠·관광기업(④팀, 5.30일) 현장점검 완료* → 그 외 분야 현장점검 지속 실시 예정

- * ③팀 (6.9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벤처투자 8개 유관협회 참여
- ④팀 (5.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관광분야 8개 기업 참여

〈 주요 건의 사항 〉

■ **[③ 팀] 투자유치기업, 상장(준비)기업 등 자본시장 이용기업**

- *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자사주매입 활성화**
→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에 우리사주조합을 포함
- 2) **K-클라우드 펀드 후속투자에 대해 투자경과기간 제한을 완화**
→ 차기 펀딩 공고시부터 펀딩 성공후 6개월 이상 경과기간 제한을 개선

■ **[④ 팀] 유망서비스 기업 中 관광·콘텐츠 분야**

- * 1) **여행업 외환 신고 절차 간소화, 외환매입증명서의 표준서식 마련** 요청
→ 빈번한 입금시 신고 절차 합리화, 정부-은행 간 공통 표준서식 마련
- 2) **콘텐츠 사업성 기반 여신 확대 및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인정**
→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등을 국책은행 등이 적극 활용토록 지속 노력
- * 클라우드펀딩, 콘텐츠가치평가 활성화 MOU, 문화콘텐츠 기술보증 우대지원제도, 문화융성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 지원을 지속강화

□ **(향후 계획)** 6월중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7월초 결과 발표(예정)

- 창업·유망기업 등 현장점검 지속* 실시

* ① 성장사다리·클라우드펀딩 이용 기업(6월4주) ② 정책보증·보증보험 이용 기업(6월4주) ③ 보건의료·SW·신성장 수출기업(6월4주)

- 특별반장인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건의 현황, 처리 방향, 중점 과제 선정 등 최종 점검회의 개최 (6월말)

- 7월초, 특별반 운영 결과 대외 발표 (주요 수용사례)

5. 금년중 국회 금융개혁법안 입법 추진

- 19대 국회에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
- (은행법)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김용태/강석진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규정
 - (자본시장법)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코스닥 기능 강화 등 → 이진복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기본법 체계 구축 → 정부입법
 - * 사전정보제공(비교공시 등),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부과, 사용자 책임 등
-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 입법을 새롭게 추진 → 정부입법
-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책임성 제고
 - * 금융지주, 은행, 보험, 자본시장, 지배구조, 저축은행, 여전, 신탁, 신용정보, 전금, 대부업법
 - **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금전제재의 법률 간 형평 제고,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제도 확대 등
 - (개인연금법(제정)) 국민입장에서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
 - * 투자일임 허용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보호 및 공시체계 구축 등 연금상품의 성격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
 - (보험업법) 보험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 *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등 보험업의 규제개혁

참 고

금년중 국회 중점 추진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 배경
은행법 (의원입법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규정	○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자본시장법 (의원입법 추진)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코스닥시장 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 (정부, 하반기 제출예정) * 금융지주, 은행, 보험, 자본시장, 지배구조, 저축은행, 여전, 신탁, 신용정보, 전금, 대부업	○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제재시효제도 도입,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제도 도입 등	○ 금전제재 실효성 제고 등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책임성 제고
개인연금법(제) (정부, 하반기 제출예정)	○ 투자일임 허용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보호 및 공시체계 구축 등 연금상품의 성격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	○ 국민입장에서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할 필요
보험업법 (정부, 하반기 제출예정)	○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등 보험산업 규제개혁 추진	○ 보험상품개발·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정부, 하반기 제출예정)	○ 금융소비의 쏠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필요

주요 현안

1.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 **(현황)** 6월 들어 코스피는 2,020선을 돌파(6.8일 2,027)하며 연중 최고점을 달성*하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강세**

* KOSPI추이 : (4월말)1,994 → (5월말)1,983 → (6.8일)2,027 → (6.10일)2,018

** 원/달러 환율추이 : (4월말)1,139 → (5월말)1,192 → (6.8일)1,157 → (6.10일)1,166

○ 5월초 美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불안했던 금융시장은 유가 상승*, 美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5월말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

* WTI유가(\$/배럴) : (5.6일)44.7 (13일)46.2 (20일)47.8 (31일)49.3 (6.10일)49.1

** 美 4월 산업생산 전월비 0.7%, 4월 소매판매 전월비 1.3% 상승

- 또한,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美 5월 고용지표 발표*(6.3일) 이후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

* 5월 비농업부문 고용 3.8만명 증가(예상치 15.5만명, '10.9월 이후 최저)

** 美 금리선물시장의 6월인상 확률 : (5.18일) 32% → (6.11일) 2%

*** 6월이후 증시변동률(%) : (코스피)+1.7 (코스닥)+1.2 (MSCI선진)△0.6 (MSCI신흥)+2.1

○ 5월이후(~6.9일) 外人 주식자금은 투자심리 회복되며 유입, 채권 자금은 만기도래물량 등으로 소폭유출(주식+1.4조원, 채권△0.3조원)

□ **(전망)** 6월중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美 FOMC 금리결정(16일), 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여부 결정(15일), 英 Brexit 국민투표(24일) 등

○ 또한, 유가도 OPEC 회의(6.2일)의 생산량 동결 실패,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등 감안시 상승세 지속 여부 불투명

* 주요IB WTI유가 전망(\$/배럴, 중간값) : ('16.2Q)40.8 (3Q)45.0 (4Q)47.5

○ 中 관련 잠재리스크(기업부채누적, 외환시장불안)와 더불어 국내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

▣ **(대응)**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사무처장 주재)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2.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 가계부채 동향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 연체율은 안정적(16.3월말 0.34%)인 가운데 분할 상환 구조가 정착중**
- * 은행 주담대 증가율(% , 전년동기비): (13) 3.4 (14) 11.1 (15) 9.9 (16.1Q) 8.5
- ** 금년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 다만,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 지속
- * 주담대중 집단대출 증가(조원 금감원): ('15) 8.7/70.3(12.4%) → ('16.1~5) 10/19(52.6%)
-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 추세
- *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 , 전년동기비): (13) 7.6 (14) 8.3 (15) 9.5 (16.1Q) 11.7

<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

-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① (모니터링·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하(1.50%→1.25%)에 따른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분석 → 필요시 대응
 - 특히,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유도 등
- ② (구조개선 가속화)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구조개선 가속화(8월~)
- *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16) 40→45 / 37.5→40 (17) 45→50 / 40→42.5
- ③ (중선효과 차단)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7월)
 -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방안('17년말 목표 15%) 마련(상호금융정책협의회)
 - * '16.1분기 상호금융권 주담대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
- ④ (총체적 상환부담 심사 강화)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담대·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DSR 산출 시스템 구축 → '17년부터 금융권 자율·단계적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9월),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7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 지속

3. 기업구조조정 방안('16.6.8) 후속조치 추진계획

< 금번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3대 의미 >

- ① 엄격한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마련된 자구계획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생존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은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일시적 자금수급의 Mismatching에 대한 불가피한 지원으로 최소화
 -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손실분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경영정상화가 가능
→ 채권단,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공감대와 협조 필요
- ②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
 - ① (해운) ① 용선료 조정, ② 사채권자 채무조정, ③ 협약 채권자 자율협약 등 3개 채무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된다면,
 - Governance 개편, 선박 신조 등 선대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보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
 - ② (조선) 중장기적 수주전망 등을 고려하여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가 없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수립
 - (선제적 자구) 조선 업황의 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온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예외없이 주채권은행의 검증 하에 자구계획을 마련
 - (고강도 자구) 대형 조선 3사는 10.3조원 + α조원의 대규모 자구계획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 '18년까지 대형 조선사는 평균적으로 설비규모 20%(15년 대비) 감축, 도크 수 23% 축소, 인력(직영·외주) 30% 이상 감축 등 대규모 Downsizing 추진

- (시나리오별 자구) 업계의 비관적 수주전망* 이외에도 최악의 상황** 까지 감안한 대응방안을 마련

* (자구계획) 향후 3년간 수주량을 과거 6년간 수주량의 50~85% 수준으로 전망

** (비상계획 등) 수주 절벽 등 Worst Case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였으며,
- 삼성중공업은 소요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등 유동성 대책을 마련

③ 전문가적 시각과 도움을 구조조정 방안에 충분히 활용

- (현대重·대우重) 회계법인의 경영·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자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필요시 보완
- (대우조선) 회계법인의 Stress Test 결과를 반영하여 여러 상황별로 자력 Risk 대응이 가능한 자구계획을 마련
- (업계전체) 조선업협회 주관으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

-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각 기업별 자구계획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

① (기업) 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세부 일정별로 Action Plan을 수립(6월 중순)하여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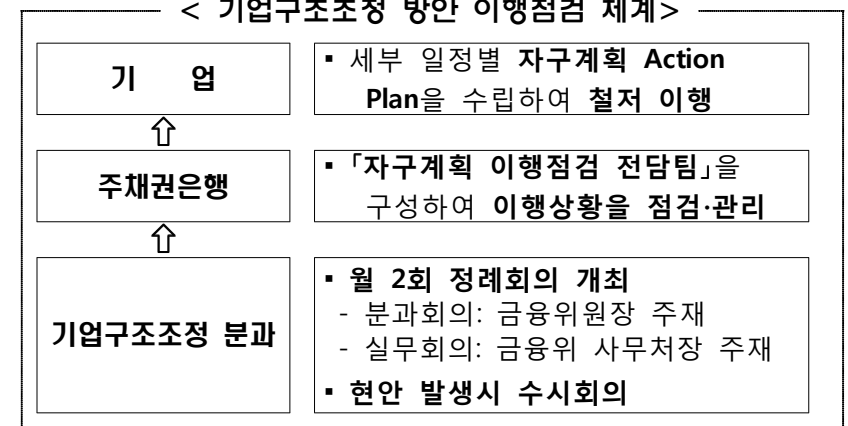
* 기업과 주채권은행은 자구노력 관리를 위한 MOU체결

② (주채권은행) 주채권은행별로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비 차질없는 이행을 관리

③ (금융당국)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

- 월 2회 정례 분과회의 개최 : 금융위원장 주재 “분과회의”와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실무회의”로 운영
- 발생 현안에 따라 분과·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즉시 대응

⇒ 조만간 금융위원장 주재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개최,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확정



< 향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

- (해운)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조선) 업계 공동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8월 중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 (철강·유화 등) 각 협회 주도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16.8 시행)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등을 추진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6.18~24, 부산)

□ **(개요)** 제27기 제4차 FATF 총회가 '16. 6. 18 ~ 24일, 부산에서 개최

- FATF는 통상 매년 3회(2·6·10월)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FATF 의장국**은 관례적으로 임기 중 마지막 총회(6월)를 자국에서 개최

* 이번 제27기에서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특별 총회 개최('15.12월)

** 신제윤 前 금융위원장은 '15.7월~'16.6월 의장직 수행 중

◀ 총회 개요 ▶

■ **기간/장소** : 2016.6.18(토)~24(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노보텔
- 18(토) ~21(화), 실무회의 / 22(수) ~ 24(금), 총회

■ **주요 참석자(600여명)**

-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FSRB; FATF Style Regional Body)
-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등

※ 22일(수) 개회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이, 22일(수) 환영만찬에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부산시장이, 21일(화) 수석대표 만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

□ **(논의사항)** 싱가포르·오스트리아·캐나다의 상호평가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 최종 승인, FATF 교육연구기구 설립 MOU 案, G20, G7 등이 요청한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등 논의 예정

*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계기로 법인과 신탁제도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인·신탁 실소유주 확인 제도의 실질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 FATF 교육연구기구 (TREIN;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 (위 치) 부산광역시 금융혁신지구
- (기 능) FATF 및 FSRB(지역기구) 회원국 공무원 등을 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식센터(knowledge hub) 역할 수행 및 연구 활동
- (인 력) FATF 사무국, 회원국 및 국제기구(IMF, WB) 등에서 국제적 전문가를 확보
* '16년 하반기 내 설립 예정

※ 6.21(화) 총회 개막 보도자료, 6.24(금) 총회결과 보도자료 배포 예정

참 고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등
-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12) 등으로 확대

□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 **회원 구성**

- 정회원(37개), 준회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 OECD 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OECD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